



공익노련의 조직발전논의에 대하여

월간 『노동사회』는 지난 호부터 동향란을 통해 각급 조직별로 진행되고 있는 산별노조 건설논의를 연재하기로 했다. 11월호의 병원노련 편에 이어 공익노련의 산별노조 건설현황을 소개한다. 독자들의 많은 관심을 기대한다. - 편집자

유병홍

전국공익·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 정책부장

1. 공익노련의 조직발전논의

조직발전, 혹은 산별노조 건설은 최근 수년에 민주노동운동을 하는 모든 사람들의 고민거리, 연구거리가 되고 있다. 민주노동전영이 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지만 그중 가장 중요하고 또 그만큼 많이

논의되고 있는 두가지를 지적하려면 아마도 대다수의 사람들이 노동자의 정치세력화와 함께 산별노조건설을 들 것이다. 그러므로 왜 산별노조로 나가야 하는가 하는 원본적인 이야기는 이제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과거와 달라진 것이 있다는 점

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은 노동자의 정치세력화이다. 노동자의 정치세력화가 무엇이나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고 또 구체적인 경로도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치적으로 권리가 없었던 노동자가 하나의 세력으로서 정치전면에 나서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반론을 펴기 힘들 것이다. 그런데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는 산별노조 건설과 밀려야 할 수 없는 관련을 갖고 있다. 노동자가 정치적으로 각성하기 위해서는 노동자로서의 계급의식, 다른 노동자에 대한 강한 연대의식이 있어야 하고 또 이러한 의식이 있어야 노동자를 한 집단으로 묶어세울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의식은 종업원의식에 토대를 두고 있는 기업별 노조와는 함께 할 수 없는 것이다. 강한 계급적 연대의식과 노동자의식을 토대로 한 산별노조가 있어야 건전한 노동자의식이 발달할 수 있고 그를 토대로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더욱 굳건히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산별노조 건설을 노동자의 정치세력화와 별개로 생각할 수 없다.

다음으로 노동법 개정으로 인한 전임자 임금지급금지를 들 수 있다. 앞으로 대다수 기업별 노조들은 자체 조합비로는 전임자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노조들간의 합병을 통해 대규모 노조를 건설해서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고 전문적이고 직업적인 노동운동가가 활동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물론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에 대처하기 위한 수단으로 산별노조 건설을 바라본다면 그것은 잘못된 관점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바와 달리 전임자 임금지급은 곧 줄어들 것이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노조간 통합을 검토하는 것이 일부에서 말하는 이면계약 혹은 재정사업보다는 훨씬 더 현실적이고 노조의 자주성을 지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기업별 노조를 산별노조로 발전시켜나가기 위한 필요성은 과거보다 훨씬 증대되었다고 할 수 있다. 우리 전국 공익·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과거 전국전문기술노동조합연맹의 새 이름, 공익노련이라고 줄여 부름)은 설립초기부터 산별전환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런데 공익노련은 다른 연맹과 구분되는 약간의 특성이 있다. 예를 들어 금속노련이라고 하면 누구든 금속노동자들의 노동조합인 것을 알 수 있고, 병원노련이라고 하면 병원노동자들의 노동조합일 것이라고 쉽게 연상할 수 있다. 그러나 공익노련(전문노련)이라고 했을 때 어떤 노동자들이 모여 있는 것인지 상이 쉽게 그러지지 않는다. 공익노련에는 공공부문, 민간부문을 물론하고 말 그대로 사회대다수 구성원의 일상 활동에 필요하거나 사회 주요 구성단위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공익성·사회적 성격이 강한 업종들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모여 있다. 업종으로 따지면 인문사회계와 과학기술계를 모두 포괄하는 정부출연연

구기관, 경제사회단체, 엔지니어링회사,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 서비스 업종 등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다. 이 때문에 공익노련 구성원들의 업종은 쉽게

정의내릴 수 없다. 물론 이런 편차는 다른 산업에도 있다고 본다. 예를 들면 1그램짜리 실편을 만드는 것도 금속산업이지만 수십만톤짜리 배를 만드는 것도 금속산업이다.

그러나 위와 같이 연맹내 업종의 차이가 있는 것은 분명한 현실이고 서로 다른 업종끼리 서로를 이질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과거에는 그랬고 현재까지도 일부는 그렇다. 따라서 연맹이 조직발전을 논의할 때마다 이러한 특성이 고려대상으로 등장하지 않을 수 없었다.

2. 소산별노조 - 조직발전전망을 제시하다

우리 연맹은 이와 같은 직관적 사정을 고려하여 우리 연맹에 맞는 조직발전 전망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물론 마음이야 공익·사회서비스 노동자를 모두 다 한꺼번에 조직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노조들이 기업별 노조의 틀에 갇혀있고 법률(97년 3월 개정 이전의 법)상으로도 새로운 형태의 조직을 건설하는 것이 그리 쉽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소망에 불과했다. 따라서 우리 연맹은 연맹의 특성을 고려하여 비교적 동질성이 높은 노조들끼리 묶는 방

법을 택했다. 이러한 우리의 선택은 다음을 고려한 것이다. 우선 동질성이 높기 때문에 노조들끼리, 노조원들끼리 서로 친근감을 갖고 있었다. 다음으로, 예를 들면 출

연연구기관의 경우 형식적인 교섭대상은 기관장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정부이기 때문에 교섭상대가 서로 같았다. 마지막으로 산

별노조로 나가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일단 기업별 노조의 틀을 깨뜨려야 한다는 것, 즉 새로운 조직형태를 만들 수 있다는 확신을 스스로 갖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고려했다. 서구의 산별노조처럼 처음부터 크고 강한 조직을 건설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꿈이었다. 그러나 큰 꿈만 갖고 구체적인 세부 실천을 어찌할지 모르고 있을 때 우리 연맹은 새로운 조직형태의 제시를 시도했다.

그것이 바로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의 창립이다.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노조들이 연맹에 소속되어 있었는데 이들은 대부분 대덕연구단지에 모여 있고 교섭을 하다보면 기관측으로부터 “우리는 힘이 없다. 정부에 산지침에 따라 수밖에 없다”는 말을 되풀이 해서 듣고 있었다. 그러나 개별 노조로서는 정부와 싸울 수 없다는 한계를 절실히 느껴다가 공동임무를 시작했다. 그나마 조금 힘이 되었다. 그러나 이런 형태의 공동투쟁은 단위노조에 서 언제든지 발을 뺄 수 있고 또 일시적이





과기노조의 설립은 새로운 노조 조직형태의 가능성을 제시했다.

고 느슨한 연대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 한계가 뚜렷했다. 그래서 아예 노조를 하나로 만드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문제를 검토하기 시작했고 정말 "누구도 가 본 적이 없는 길이고, 무엇하나 베껴쓸게 없는 시험"인 소산별 노조를 건설했다. 94년 4월 15일의 일이다. 그러나 노동조합들이 기업별 형태로 남아있기를 바라고, 노동조합의 힘이 강해지는 것을 두려워한 정부의 트집잡기로 인해 신고필증이 교부되지 않아 수개월에 걸쳐 연맹, 업종회의, 전노대, 외국 노동단체의 지원을 받아가면서 투쟁해야 했다.

과기노조의 설립에 대해 "기업별 노조에 비해서는 덩치가 크지만 결국은 기업별 노조의 연합체에 불과하다", "본래적인 의미의 산별노조와는 거리가 멀다"는 비판이 있었고 이는 상당부분 사실이지만 과기

노조 설립이 민주노조진영에 미친 영향은 컸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당시 법률하에서도 새로운 조직형태를 제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 주었고 이를 통해 산별 노조 건설 논의를 활성화시켰다. 실제로 과기노조 설립 이후 농협노조, 의보노조, 방송단일노조 등이 설립되거나 논의가 활발해졌다.

3. 교섭권위임과 조직발전

위에서는 공동임단투를 통해 조직발전을 이루어냈다고 간단하게 적었으나 과정이 그렇게 간단한 것은 아니었다. 임단투 시기가 되면 연맹은 다른 연맹과 마찬가지로 공동임단투를 진행했다. 그러나 잘 아다시피 공동임단투는 대개 시기를 같이 하는 것으로 그치고 마는 경우가 많았고 그

나마도 단위노조 사정에 따라 이달이 있어도 제지하기가 힘들었다. 가장 결정적인 한계는 공동임단투가 시기집중을 통한 세과시라는 것 이상의 새로운 의미가 없었다는 점이다.

우리 연맹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제기노조의 단협에서 철거투쟁(1997).

교섭권 위임과 이를 통한 공동교섭전술을 채택했다. 임단투가 시작되면 교섭에 들어가기 전에 연맹으로 교섭권을 위임하고 연맹에서는 업종별로 유사한 노동조합들을 모아 공동투쟁단위를 구성하고 그 단위별로 공동교섭단을 꾸려서 교섭에 임했다. 이 전술은 한편으로는 교섭력을 높여서 좋은 성과를 내자는 것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동질성이 높은 노동조합들끼리 공동교섭을 통해 더 높은 동질성을 이루어내고 이를 통해 소산별 노조를 건설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끊임없이 교육하고 선전했다. 단위노조가 갖고 있는 가장 큰 권한이

교섭권인데 이를 상급단체에 넘긴다는 것은 이미 그 조합원들이 기업별 노조외식을 상당부분 깨고 있고 장기적으로 기업별 노조 이외의 더 큰 조합으로 나갈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연맹에서는 교섭권 위임전술과 공동교섭을 통해 연맹내 다양한 업종별로 공동투쟁경험을 축적했고 그 과정을 통해 기업별 노조를 넘어 서서 소산별 노조를 건설하자는 논의를 자연스럽게 이끌어왔다. 그 성과로 97년 임단투가 끝난 이후 8월에 인문사회계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노동조합들이 모여서 전국연구전문노동조합을 결성했고 엔지니어링 노동

조합들이 12월에 전국전문기술노동조합(가칭)을 결성할 예정으로 있다.

4. 앞으로는

우리 연맹은 앞으로도 당분간 교섭권 위임과 그를 통한 공동교섭전술을 구사할 예정이다. 또한 이런 공동투쟁을 통해 강한 조직력과 결속력을 갖춘 노동조합들을 중심으로 소산별 노조 건설을 추진할 것이다. 이를 위해 아직은 논의단계이므로 수정이 있을 수 있기는 하지만 98년도 임단투를 12개 정도의 공동투쟁단위로 묶어서

진행할 예정이다. 우리는 공동임단투를 통한 조직발전논의가 유일한 방법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노동조합의 특성상 가장 활발하게 움직일 때가 임단투철이고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교섭권한은 노동조합의 핵심적인 권리인데 이를 위임한다는 것은 그만큼 의식이 성숙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전술이 상당히 유용하다고 본다.

여기에서 한가지 꼭 지적하고 넘어갈 것이 있다. 과연 소산별 노조가 산별로 나가는 지름길인가, 공익노련이 소산별 노조 건설을 통해 조직발전을 꾀하고 있으니 다른 연맹도 그와 같은 경로를 채택하는 것이 좋을까, 소산별 노조건설이 현 시점에서 최선의 방법인가? 이에 대해서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답변을 할 수밖에 없다. 소산별 노조라는 말 자체가 우리 연맹에서 만들어 쓰기 시작한 말이다. 과거노조라는 새로운 형태를 만들기는 했는데 이를 기업별 노조라고는 할 수 없고 서구의 산별노조와는 거리가 멀고 해서 적당한 용어가 없어 산별노조보다는 훨씬 작지만 기업별 노조를 넘어섰다는 점에서 또한 앞으로 산별노조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이런 용어를 만든 것이다. 소산별 노조는 산별노조로 나가는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다양한 실험형태중의 하나일 뿐이다. 또한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다양한 업종이 모여있는 우리 연맹의 특성상 동질적인 업종별로 모이다 보니 소산별 형태를 택한 것이다. 연맹 소속 노조의 동질성이

높은 연맹이라면 연맹 전체를 하나로 묶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사실 한국에서 산별 연맹이라고 부르고 있는 연맹들은 서구의 산별 노조만큼 큰 범위를 포괄하고 있지 못하다. 그렇다면 현재의 여러 연맹들을 크게 묶어 진정한 의미의 산별 노조를 결성하는 것까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현재 우리 연맹이 고민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는 교섭방식의 전환이다. 노동조합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기능은 단체교섭이다. 소산별 노조든 산별노조든 결성했다고 해도 통일교섭, 적어도 집단교섭을 생취하지 못한다면 산별노조 건설의 의미가 크게 줄어들 것이다. 과거노조에서는 끊임없이 통일교섭 생취를 위해 애쓰고 있으나 정부측의 완강한 거부로 아직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에 과거노조에서는 통일교섭안을 들고 나가 대각선교섭을 통해 이를 관철시킴으로써 실질적인 통일교섭을 이루어내고 있다. 그러나 이것도 아직은 완성된 형태라 할 수 없다. 새로 건설되는 소산별 노조를 포함해서 과거노조의 내용·형식 양면의 통일교섭을 생취하는 것, 이것이 새로운 고민이다.

우리 연맹은 소산별 노조 건설을 통해 조직발전전망을 제시하고 산별노조 건설논의를 활성화시켰듯이 대산별 노조건설에도 앞장 설 것이다. 단순한 논의가 아니라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서. ❖